

광주현지취재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추진과정과 쟁점들

가치와 비전의 충돌, 혹은 헤게모니를 둘러싼 일련의 ‘폴리틱스’?

이남훈 자유기고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그 갈등의 양상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양한 주체들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어, 점점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과연 광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배경은 무엇일까. 국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추진기획단’,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광주시’, 광주 시민을 대표하는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 세 주체의 입장을 각각 들어보고, 추진과정에서 불거졌던 쟁점들을 정리해본다.

광주

시민들에게 지난 3월 28일은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마침내 발효된 날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 당선 직후 시작된 4년간의 사업기획 과정이 구체화되면서 2006년 8월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후 7개월 만에 발효된 것이다. 이로써 대규모 도시변화 프로젝트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이 발효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 각종 절차는 물론, 추진주체, 재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이는 명실공히 ‘아시아의 문화중심, 광주’를 만들어낼 국가적 차원의 도약대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다. 그 이름도 아름다운 ‘빛고을’ 광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의 발효와 함께 아시아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광주를 상상하며 희망에 부풀었을 것이다.

‘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기묘한 해프닝들
그러나 그 다음날인 29일 오후 2시경.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지어질 구 전남도청 앞의 소공원에서는 광주 지역 언론들의 눈에 ‘이상하게 비친’ 한 시위가 벌어졌다. 시민단체 회원 4천여 명이

집회를 갖고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강화하라’며 성토했고 나선 것이다. 집회장에 참석한 시민의 대다수는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다. 이날 현장을 취재한 D 인터넷 신문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노인들은 시위 집회에 동원되어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동별로 지정된 자리를 지키며, 이들을 인솔한 안내자의 신호에 일사불란하게 집회 현장에서 박수와 구호를 따라 외치고 … (중략) … 집회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인솔자를 따라 집회현장을 빠져 나가는 모습이 씩씩한 여운을 남겼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각 동별로 모여 있던 곳에서 인원을 점검하며 참석자들이 티켓과 현금을 바꾸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여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날 전남 지역언론인 J 일보는 이 시위가 ‘관제 데모’였으며 ‘광주 동구청 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문화전당을 둘러싼 논란에 행정기관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뿐만 아니라 J 일보는 ‘이날 집회와 관련, 동구청이 각 부서별로 의견과 홍보, 차량 및 물자지원, 시가행진 등을 담당하는가 하면 직원 1인당 동원인원

책정, 관변 단체의 할당인원 독려에 나서
는 등 사실상 집회의 전 과정을 총괄한다
는 문건이 공개돼 ‘관제 데모’ 논란이 일
었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이들 언론 보도에 따르
면 광주시 동구청이 고령의 할머니와 할
아버지들을 동원, 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시위를 벌이게 했다는 이야기다. ‘이상한
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문화중
심 도시사업은 ‘국가사업’이고 광주시 동
구청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이다. 도대체
왜 광주시 동구청은 자신들이 결국 추진
해나가야 할 국가사업을 향한 시위를 부
추겨야 했던 것일까.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
는다. 특별법이 발효되기 하루 전날인 3월
27일에는 총 22개의 광주전남지역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가 출범했다. 이들은 ‘광주문화중심도시
를 위한 범시민협의체’로서 지역발전을 위
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민단체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모 인사
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애초 이 단체가 결성되기 위한 움직임
이 있을 당시, 가장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경실련과 환경운동
연합은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물론 협의

회의 방식이 ‘연석회의’로 바뀌면서 결국
에는 합류했지만 애초에 이들 단체가 참
여를 거부했다는 것은 분명 뭔가 ‘내막’이
있을 것이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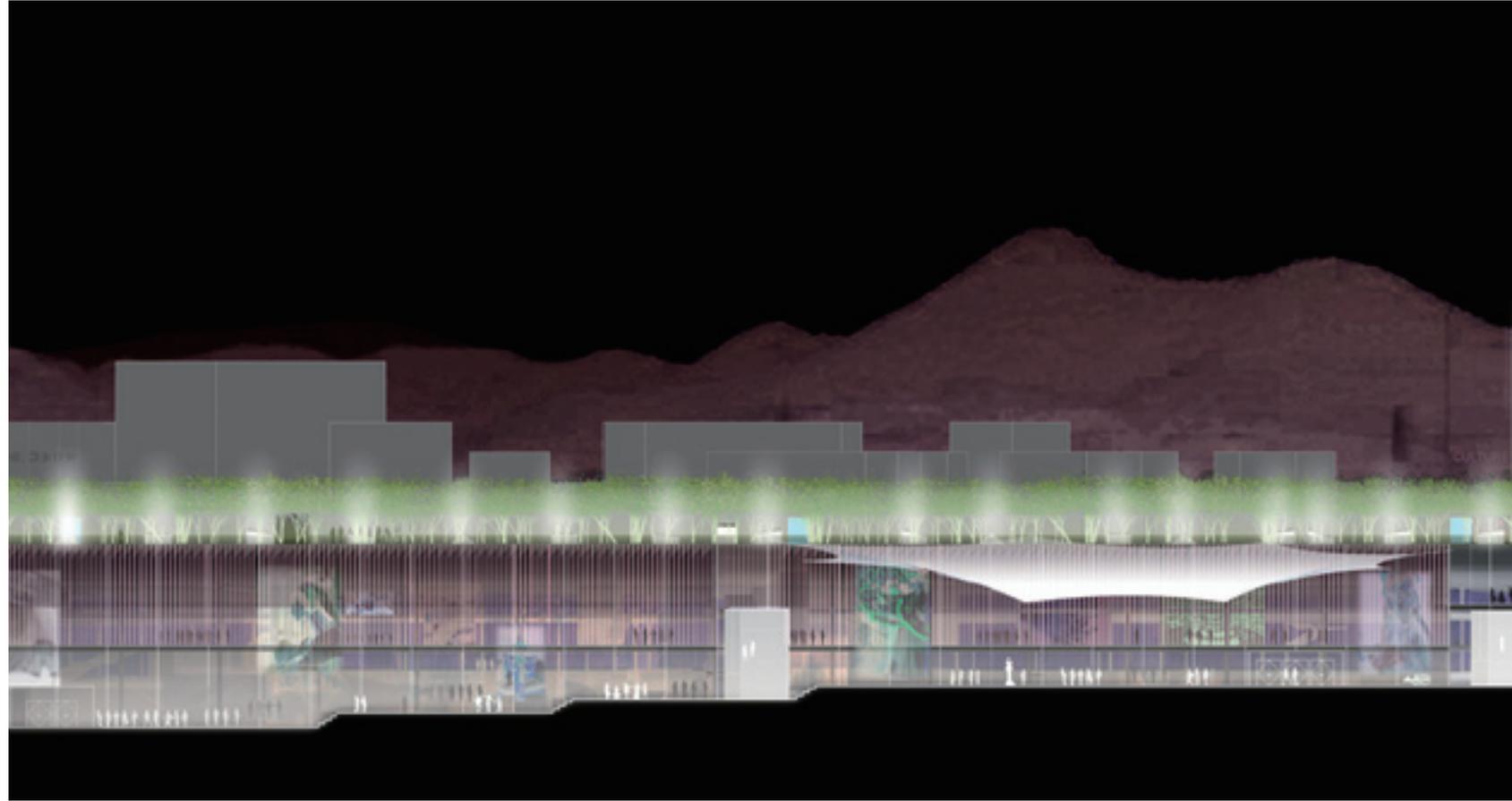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향후 광주의 미
래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국책 프
로젝트이고, 이를 위해 전 시민단체들이
‘대동단결’해도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왜
그들은 초창기 논의에서 참여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것일까. 특히 일반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단결과 조직화에 능하다는 점
에 비추어본다면 무언가 ‘속내’가 있었음
을 추론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일까.

‘폴리틱스’인가 ‘가치론으로의 치환’
인가?

이른바 ‘관제 데모’ 논란과 일부 시민
단체의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참여거부
문제는 사안의 복잡다단함을 여실히 보여
주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주체들
은 극명하게 괴리를 드러내고 있고, 담론
들은 더이상 화합하기 힘들 정도의 부조
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 사



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안 중 ‘빛의 숲’.

업에는 세 명의 주체가 있다. 국책 프로젝
트 자체를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
중심도시 추진위원회 산하 추진기획단(이하
추진단)’,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
는 지역 자치단체인 ‘광주시’, 그리고 앞으
로 조성될 문화중심도시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할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의 시민단체’가 바로 그들이다.
우선 명확하게 지적하고 가야 할 부분은
이들 세 주체의 의견이 전부, 각각 ‘다르다’

는 사실이며 그 ‘다름’을 해석하고 있는
시각 역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
다.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른바 ‘담론의 층위’가 포개
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문제와 국가적
문제가 혼합되어 있고, 이는 다시 ‘아시아’
라고 하는 국제 단위의 네트워크 문제로
까지 번져나간다.

우선 시각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논의과정, 그리고 사업추진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자. 최인기 추진단 문화전당운영팀장/도시운영팀장의 이야기다.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왔다. 일부 국책 프로젝트들은 진행과정에 문제가 많거나 때로는 용두사미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사업만큼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 건축설계를 공모하는 과정 등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왔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 시민단체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해왔던 단체 중의 하나인 ‘광주전남시민연대’ 김지원 사무국장은 사뭇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난 4년간의 세월은 전혀 생산적이지 못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은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호남에 비전을 주는 국책 프로젝트이고 도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 자체의 의미 그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지금 반성과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위 손재홍 의

원도 시민단체들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추진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자 참여정부의 지방특성화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수도’ 조성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주시나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추진단 관계자는 140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광주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광주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지역의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획안 자체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추진단과 시민단체, 광주시의 의견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이다. 한편에서는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온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사업,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면서 상호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이러한 견해 차이가 생긴 원인에 대한 해석마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문화에 폴리틱스(politics)가 개입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반대편에서는 “생산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치환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맞받

아치고 있다. 김호균 시민문화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제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폴리틱스가 문화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들어오게 되면서 난항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 일종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광주지역의 정당 정체성 역시 이러한 폴리틱스를 발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자체 선거가 있으면서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판지를 걸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정책이 빛을 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입장이 아니겠는가.”

다음은 최인기 팀장의 말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러한 정치적 입장,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이 사업은 망해버렸다. 비록 앞으로 어떤 이해와 화해의 제스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쇼에 불과하다. 이 문제는 계속 잠복해서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겨우 정치적인 색채를 벗어나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다시 정치화되었다.”

‘공명정대’해야 할 국가 문화도시 프로젝트에 지역의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사심(私心)’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이야기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지원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지금 광주에서는 문화중심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에 있어서 비판적 영역이 가치론으로 치환되고 있다’고 말한다. 즉, 견해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거치고 대안을 이끌어와야 하는데, ‘견해의 차이’를 ‘옳고 그름의 차이’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따라서 어떤 단체이나를 막론하고 ‘다른 견해’를 내놓으면 ‘틀린 의견’으로 단정 짓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혀 ‘폴리틱스’의 문제가 아닌 것들 자꾸 ‘폴리틱스’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광주지역민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재홍 광주시의회 의원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문화수도 조성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추진단의 독선으로 대통령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폴리틱스의 문제’에 대해 조선대학교 중국어과 김하림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그 출발부터 ‘폴리틱한’ 문제였다는 점이다. 소외되고 배척받아왔던 호남 문화를 배려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폴리틱한 이야기가 아니었던가? 중앙의 폴리틱스와 지자체의 폴리틱스가 대립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광주에는 광주의 지역적인 요구가 있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적인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배려해야만 한다. 이제 와서 지역적인 요구를 폴리틱스라고 치부하는 것은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 ‘폴리틱스’를 둘러싼 이야기의 중심에는 추진단의 ‘독선’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들이 가진 가장 큰 불만은 추진단이 ‘지역의 요구’를 무시하고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추진단은 왜 그렇게 ‘독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추진단의 태도를 정말로 ‘독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치의 충돌 VS 거버넌스에서 소통의 문제

이제까지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역적인 의견대립과 집단적인 충돌을 낳았던 가장 큰 이유 역시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따져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매울 수 없는 ‘간극’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김호균 팀장은 이를 ‘독선’이 아닌 ‘가치와 비전의 충돌’로 요약했다.

“사업을 독선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은 아니다. 우리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의미부터 출발한다. 도대체 문화중심도시를 만들려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 이는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망가진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며, 그간의 도시건설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국책사업은 전시장이나 공연장을 만드는 수준의 개념이 아니다.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적 개념과 그것을 실현하게 할 시설이고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산업적 요소’로 자리 잡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문화와 산업이 융합되어 ‘문화가 밥 먹여주는’ 새로운 문화 컨버전스의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는 문화가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문화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개발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의견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가 ‘가치의 충돌’로 드는 예는 이런 것들이다. 첫번째는 ‘장르 중심의 이해와 욕구’이다. 애초에 정부에서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시작하자 광주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장르에 유리한 문화시설의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연단체는 공연장을 지어달라고 하고 미술단체는 현대미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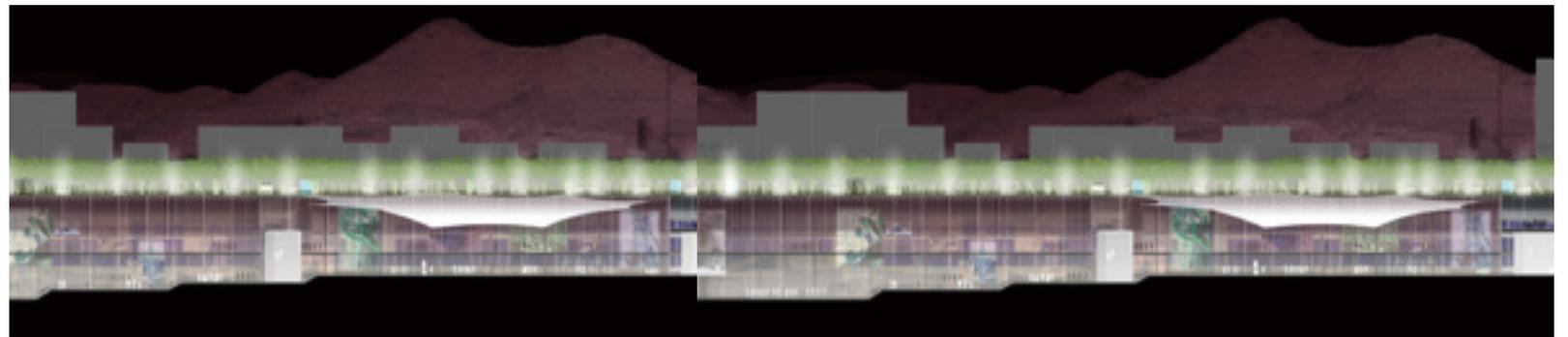
술관을 원했다. 오페라 관련 인사는 ‘오페라 극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추진단의 눈에 이러한 요구들은 ‘문화중심도시 사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사업추진 당시 광주시는 요청사업으로 ‘100만 평의 문화산업단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추진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결국 기존의 도시형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된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또다시 지역의 ‘장르적’, ‘70년대적 발상’에 의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해졌다는 현실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치의 충돌’이라는 추진단의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인가. 시민단체와 광주 지식인 사회는 오히려 추진단이 ‘우월주의’에 빠져 있으며 나아가 ‘독선적’이기까지 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지원 사무국장의 이야기다.

“추진단은 정보의 소통, 일의 진행방

식에서 문제를 드러냈고 지역 시민들의 보편적인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 더불어 각 시민단체들, 즉 경제, 환경,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들 역시 현안과제에 매몰되었고 담론생산의 주체인 대학연구자들 역시 용역에 정신이 없다 보니 함께 모여서 한 토론의 결과라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발언에 불과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불어 일부 대학교수는 ‘설득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사실 문화중심도시의 ‘가치와 비전의 충돌’이라고 논할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니다. 추진단이 내세운 ‘신인본주의’라는 컨셉트 역시 20세기 초반에 나온 이야기의 재탕에 불과하다. 가치와 비전이 충돌할 만큼 수준 높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추진단이 무엇을 내세우든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내가 보기에 추진



단이 준비한 몇몇 프로그램들은 그 실험성이 인정되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지역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지 않은 실험적인 프로그램만으로 전체 사업을 이끌어가기에는 힘들다. 이 점에서 분명 추진단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시각차이가 있다.”

결국 지금까지 추진단이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정책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난항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추진단은 그간 ‘설득의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일까. 이는 다시 ‘거버넌스(governance)’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거버넌스는 행정적인 의미에서의 통치행위 이외에 기타 통치를 위한 제도, 방법, 도구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시민단체, 시민과 정부의 관계, 여기에 국가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한 국가의 행정 자체가 분권화, 네트워크화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오랜 시간 동안 독재 정권이 중앙권력을 휘둘렀던 한국 현대사를 비춰봤을 때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관광부 산하 정부 산

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추진단은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조직화했던 것일까. 일단 추진단은 사업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아예 협상과 소통의 카운터파트너가 없었다고 한다. 당시 유일한 카운터파트너였던 광주시의 경우 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자 지정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소통의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그 이후 광주시장은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김호균 팀장이 당시를 회상했다.

“2004년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내용상의 쟁점은 별로 없었다. 그때도 물론 시민참여와 소통의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틀 자체도 만들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우리가 거버넌스의 문제를 정확히 거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들이 있다. 바로 상대 주체가 정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없이 많은 요구와 바람이 있는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주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카운터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수많은 욕구들을 자정화, 일원화해내지 못한 것이

소통 부재의 원인이라면 원인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진단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 지식인들의 진단이다. 김하림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사업의 주체인 문화관광부 자체 행정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해야만 한다. 산업자원부와 농림부는 아마도 이 정도의 거대 국책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광부에서 한 국가의 도시를 조성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는가? 경험의 부재가 이러한 국책사업의 진행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를 꿰뚫어 볼 수 없게 만들지 않았나 진단해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과 열정이다. 이것을 담보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다. 추진단의 말처럼 이는 단순히 건물 몇 개만 짓고 마는 사업이 아니지 않은가. 광주시민들은 대대손손 이 사업의 영향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광부는 ‘이 사업이 망하면 도시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했다. ‘우리의 이상과 가치, 비전이 정확하고 올바르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선진적인 우월주의를 ‘선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러한 불만이 사업의 예산규모와 애초의 행정적 근거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체 사업비가 5조 원인데 그 중에서 순수국비는 2조 2천억 수준이다. 그리고 그 순수국비의 80%가 전당 건립에 사용되었다. 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13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거대한 국책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걸 전당중심의 사업이며, 문화관광부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과연 이것이 호남을 위한 ‘국책’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랜드마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층들의 집약체가 바로 ‘랜드마크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쟁은 문화전당의 설계와 관련되어 최근 몇 개월 사이 광주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애초 ‘관제 데모’ 논란도 바로 이 랜드마크 논쟁에서 촉발된 셈이다.

문화전당은 전체 문화중심도시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전당은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의 상징물이자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곳에는 ‘아시아 문화교류센터’, ‘아시아 문화원’, ‘아시아 문화창조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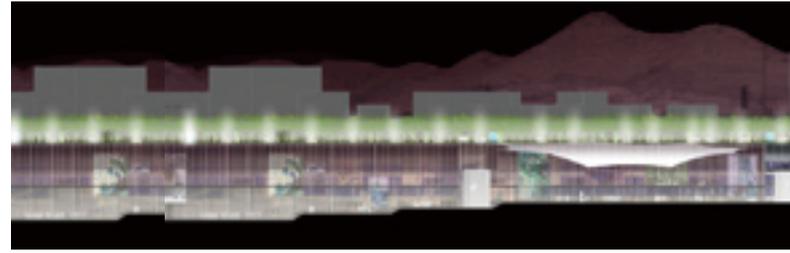
‘아시아 아트플렉스’, ‘어린이 지식문화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며 아시아 문화콘텐츠에 대한 총괄경영, 철학적 토대의 마련, 문화기획자와 경영자의 양성은 물론 창작 아틀리에의 기능과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진단 스스로가 ‘핵심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만큼 확보된 예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이 투자되고 있다. 현재 부지 확보를 마치고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다.

문화전당에 대한 논란은 첫째,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다’는 것과 둘째, ‘전당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지없이 ‘가치의 충돌’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문화전당은 추진단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개념 건축양식’이었고 광주의 역사적 전통성을 드러내주는 자연친화적인 건물이었지만 일부 광주 지역언론과 시민은 ‘지하에 있는 건물’, 나아가 ‘지하벙커’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수천 억의 비용을 땅속에 퍼붓냐’는 비난도 그렇게 시작된 것이다.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저층 지상 건물’의 컨셉은 ‘지하벙커’로 격하되면서 현격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광주시의회 손재홍 의원의 이야기이다.

“문화전당이 지하로 건립되면 도시를 상징하는 대표성이 약해 건물 자체만으

로도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상품 기능이 미비해진다. 전당 자체를 프랑스의 에펠탑이나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혹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도시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조성해야 한다. 멋지고 웅장한 기념비적 건축물을 건립해 문화전당 자체만으로도 유명세를 치를 수 있는 랜드마크가 조성된다면 열악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멋진 랜드마크 건축물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광주를 많이 방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방법이 낡아진 지역경제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인 동시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결국 랜드마크 자체가 광주라는 도시의 상품이 되어야 하고 그 자체로 경제적 부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향후 지역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광주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다. 앞서 ‘관제 데모’ 논란을 일으켰던 동구청도 바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에 ‘국가사업’을 위해 ‘국가기관’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진단의 견해는 좀더 근본적인 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최인기 팀장의 이야기이다.

“랜드마크는 시대적인 이념과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냥 무작정 크고 높게 세운다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21세기는 무엇인가. 아시아, 광주 지역의 전통성의 맥락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표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시민친화적인 ‘시민공간+문화시설’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 ‘5·18의 정체성’까지 함께 표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전당은 ‘지역시설’이 아니고 ‘국립시설’이다. 국가가 하는 사업에 지역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게다가 주민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랜드마크는 예술의 창작과정에 대한 이해, 전문성, 그리고 미래의 흐름도 함께 꿰뚫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5·18이 밥 먹여주냐, 그래가지고 관광객이 오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518m 높이의 거대한 구조물이라도 세워야 관광객들이 몰려들

고 사진도 찍을 것이 아니겠냐며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

두번째로 전당의 기능과 관련해서도 추진단은 광주 지식인 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추진단의 입장에서 전당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연구와 교육기능까지 모두 갖춘 ‘총체적인 문화시설’이 되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창조와 교류,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가 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광주 지식인 사회는 ‘지역의 이해관계만 들먹여’ 전당에서 연구와 교육의 기능을 가져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화전당은 자신만의 콘텐츠를 갖지 못한 채 그저 ‘건물’에 불과하게 되고 전체적인 모양새는 절름발이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이렇게 지역민들이 연구와 교육기능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이유 자체를 ‘학교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불안의식에서 발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하다못해 박물관에도 학예사들이 있어 연구와 교육을 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해 김하림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문화전당과 광주지역이 따로 굴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지역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 전략적 제휴를 해야 한다. 인력이 필요하면 대학에 요청하면 된

다. 어차피 전당에서 연구교육을 하려면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필요한 부대시설이 많은데, 대학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지 않은가. 비효율적으로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사실 현 단계에서 문화전당과 관련된 논쟁, 특히 첫번째 랜드마크에 대한 논쟁은 사실 가장 첨예할 뿐만 아니라 양 진영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절실한 지역경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추진단 측에서는 문화전당이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철학을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민들의 말만 들을 수도 없는 문제다.

하지만 이같은 논의와 논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 랜드마크 문제는 서서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추진단 측에서 시민단체와 광주시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일부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각 진영 간의 ‘수용과 타협’은 향후 문화중심도시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이 되고 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 주체들 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겪어왔던 시행착오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든든한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이며 더불어

어 앞으로의 화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물론, 광주시 역시 그간 ‘의사소통 시스템의 미비’를 인정하면서 늦게라도 일정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취재 중에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광주 시민들은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 비전을 가지고 충분히 설득한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것이며 또한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우리들은 우리의 터전인 광주가 진정으로 아시아 문화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아마도 이 말에 대해서는 추진단, 시민단체, 그리고 지식인 사회와 광주시 역시 충분히 수긍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특별법이 발효된 지금부터이다.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의지 역시 결코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남훈** 1971년에 태어났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신동아>, <주간동아>, <월간중앙>, <일요신문>, <뉴스메이커> 등의 시사지에 현장성을 살린 르포라이팅과 논픽션 다큐멘터리를 기고하며, 출판기획을 병행하고 있다.

